

가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 기준으로 산정하, 국고 부담률을 최소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도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생산·영업 시설과 장비의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해 보다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피해 주민 개개인의 회복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재건까지 고려한 조항도 담았다.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일상 복귀와 지역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 더불어민주당 산불특위는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산불 직후 두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주민들과 아픔을 나눴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산림청, 소방청, 경북도 등 유관기관의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특히 전날에는 피해자 증언을 청취하고 법안에 반영할 점을 검토하는 ‘산불특위 피해자 증언 청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피해자들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산불이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재난이었다”며 “이와 같은 재난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응 체계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재난을 넘어 회복으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이번 초대형 산불은 기후위기와 맞물려 발생한 복합재난이자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단 열흘 만에 48,106ha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이마저도 축소됐다는 의혹이 무성합니다. 앞서 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는 피해면적이 10만ha 안팎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어제(17일) 각 지자체와 당국 등에 따르면 산림청을 포함한 정부 기관 합동 조사 결과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9만ha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83명의 소중한 생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주택 4,760동과 국가유산 35건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농림수산업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말 그대로 참혹한 재난이었습니다.

이번 재난은 개인의 실화로 시작되었지만 기후위기와 맞물려 증폭된 ‘복합적 재난’입니다. 이상 고온과 건조, 그리고 강한 바람이 겹쳐 순식간에 초대형 재난으로 번졌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최저였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경상권 지역은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로 인해 극도로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꺼도꺼도 다시 살아나는 ‘좀비산불’, 하늘을 날아다니는 ‘괴물산불’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삶터 일터를 바라보는 피해주민들의 절망의 깊이는 끝을 짐작키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번과 같은 복합재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재난지원금 수준으로는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것은 물론 피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우리 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는 초대형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을 위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보상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토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특별법에서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챙겼습니다. 또한 현장의 이재민들은 현재의 보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계 안정, 그리고 피해를 본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단가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책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후 4개월간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 기능은 사실상 멈췄고 그 와중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난 앞에서도 오로지 대권 놀음에 빠져있고, 정부는 느장 대응과 찔끔 추경으로 복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산불 피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최악의 산불 피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파괴의 미학’, ‘전화위복’ 같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폄하했고, 급기야 재난 한복판에서 휴가를 내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고통 앞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산불 직후 2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실상을 점검하고 피해주민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산림청, 소방청, 경북도 등의 기관보고를 받고, 어제 <산불특위 피해자 증언 청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의 생생한 피해 증언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과 관련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특위 차원에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신속히 심사되어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회복을 약속드립니다.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025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김병주·한병도·임호선·신정훈·어기구·윤건영·이원택·박정현·안도걸·염태영·임미애
·조계원·허성무·김상우·박규환·송순호·이영수)

[첨부] 산불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사진

